

#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비방·고소전' 얼룩

양부남 "광주 청년들, 강 사퇴 요구" 강위원 "허위사실 공표...법적 대응" '후보 지지 문자' 시의회 의장 가세 당내 갈등 지속... "지방자치제 폐해"



양부남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 1번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와 기호 2번 양부남(서구을) 의원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 문자 폭탄, 고소·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일각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강 대표와 양 의원의 선거 결과가 오는 8월4일 발표된다. 투표는 8월1~3일 권리당원 ARS와 4일 대의원 현장 투표로 진행된다.

공식적인 선거 유세 기간이 사실상 만 하루 남으면서 양 측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광주청년 518명, 성비

위 연루 강위원 후보 사퇴 요구'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청년들이 강위원 후보의 성비위·음주운전 등을 지적하며 시당위원장 후보로서 부적합하다고 목소리 냈다"고 전했다.

내용에는 강 대표의 △성추행 및 2차 피해 손해배상 1000만원 △5·18 당일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신뢰·도덕성 갖춘 시당위원장 필요성 등이 적혔다.

강 대표 선대본부는 이날 반박문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흑백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성범죄와 관련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또 5월18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을 막

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며 "성비위 전력자·살인사건 연루자 및 5·18 무면허 음주운전자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과 이날 기자회견을 한 모든 이들에 대해 광주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구의원들의 '노골적인 시당 위원장 후보 줄서기'도 눈총을 사고 있다.

시·구의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를 공개하고, 후보의 공약과 투표방법 등을 안내한 뒤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문자 대상이 100명 이상이거나 개인이 보내지 못하면 후보 선거캠프에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한 뒤 단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일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전날 "지방의원을 앞세워 조직적 '문자 폭탄'을 보내지 말라"며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수정 광주시의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

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 의장은 전날 오후 6시께부터 '양부남 의원을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는 제목의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후보 지지 선언과 투표 방식 및 후보 공약이 소개됐다.

다음 날 문자를 확인한 일부 시의원들은 "의장직을 내세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의회 전체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공식 항의했다. 특히 시의회는 최근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의원 간 단합에 따른 문제로 재선거를 하는 등 흥역을 앓았던 터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수기(광산5) 시의원은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시의회 대표다. 이런 사안은 가급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신 의장의 문자가) 모든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다. (양 후보 측의) 일방적인 문자라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장은 "의장도 당원이기에 당내 경선에서 누군가 선택하고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의원이 아닌 의장으로 문자 발송된 것에 대해서

는 알지 못했다. 문자 발송은 후보 캠프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 선대본부 측은 "앞서 신 의장이 캠프에 방문, 문자 발송에 동의해 전날 웹 발송했다. 문자 비용도 의원 자비로 진행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의원이었으나 그 사이 의장으로 직함이 바뀌어 문자도 그에 따랐다. 논란이 일 줄 몰랐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의 줄서기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스스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민의 수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의 폐해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생긴 불신·반목이 채 해결되기도 전에 시당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당 대표 선거보다 더 주목받는다'는 말을 한다. 긍정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 상호 비방 없이, 당원 중심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 후유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저 걱정할 뿐"이라고 걱정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비공개 3자 회동 '빈손'

광주시, 회담 정례화·여론조사 제안 무안 '군공항 반대'...입장차만 확인



배일권(왼쪽)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30일 광주시청 5층 기자실에서 광주·전남·무안 3자 회동 개최 결과 관련 차담회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전남, 광주, 무안 3자 회동에 따른 공동입장문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무안군수가 비공개로 3자 회동을 가졌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로 끝났다.

3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 김영록 도지사,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동안 영암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민간·군공

항 무안 통합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무안군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는 시종 일관 반대 입장을 물러서지 않는 무안군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고, 다시 만나지는 기약도 없었다.

지역 최대 현안을 두고 두 광역지자체장이 아무런 소득없이 일방적으로 무안군에 끌려다니 셈이다.

회담에서 광주시는 3자회담 정례화, 공동 소음 측정·여론조사, 무안공항도시비전 토론회, 통합공항 이전 위한 실무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 전남도가 제시한 '통 큰' 지원안을 위해 1조원 지원 이외에도 'RE100 국가산단', 광주 산하기관 일부 이전, 중앙기관 이전시 최우선 지원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전남도 역시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RE100 국가산단' 조성고 호텔, 카지노,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미래형 신도시 개발을 약속했고, 나아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공공의 장을 만들자는 제안도 했

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무안군 측은 "민간 공항이 들어오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큰 것은 아니다. 군 공항은 절대 반대한다. 무안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3자 회동 정례화는 거부했지만 추후 만남에는 참여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무안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 공항을 받을 수 없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며 "빠른 시기에 추후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도 향후 대책을 준비 중이다. 무안군의 입장을 알았으니 거기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말까지는 무안군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해 '플랜B'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

#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종 계약 체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10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오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를 사업확대